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3.7.19.(수) 조간	배포	2023.7.18.(화)			
담당부서	자산운용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690)	
		담당자	팀 장	이현덕	(02-3145-7620)	
	금융투자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김진석	(02-3145-7010)	
		담당자	팀 장	최상두	(02-3145-7012)	
	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총괄반	책임자	단 장	장창호	(02-3145-7830)	
		담당자	반 장	박시문	(02-3145-7832)	

**금융투자회사 대주주·임직원의 사적(私的) 이익추구,
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하겠습니다.**

I. 검사실시 배경

-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*하고 있는 가운데

* '23.6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916사로 '18년말(515사) 대비 77.9% 증가

-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·임직원이 위법·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

-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,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혼드는 행위로
- 금융감독원은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중점 검사항목*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중에 있습니다.

※ '23년도 업무계획('23.2.6. 발표), 금융투자 업무설명회(3.16. 개최) 등 참고

[참고] 연도별 금융투자회사 현황 (단위 : 사)

구분	'18년말	'19년말	'20년말	'21년말	'22년말	'23.6월말	'18년말 대비
증권·선물·종금사	63	62	63	64	64	65	2사↑ (3.2%)
부동산신탁사	11	14	14	14	14	14	3사↑ (27.3%)
운용사	255	297	326	350	437	457	202사↑ (79.2%)
자문·일임사	186	198	221	294	379	380	194사↑ (104.3%)
합계	515	571	624	722	894	916	401사↑ (77.9%)

II. 주요 적발 내용

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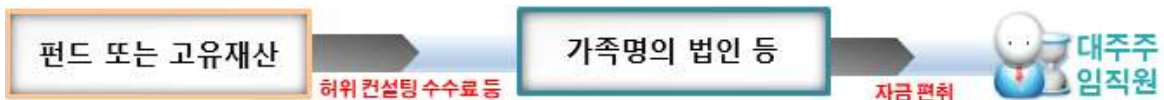
- ☑ 대주주·임직원이 ❶허위·가공 계약, ❷미공개 직무정보 활용, ❸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

-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(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)가 투자기회를 제공 받아 이익을 향유하거나, 펀드·고유재산 등을 편취

※ 각 유형별 세부 적발 사례는 <붙임> 참조

유형1 허위·가공계약 등을 활용한 자금 편취

- ◆ 허위·가공의 공사계약, 컨설팅 계약서 등을 꾸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족명의 법인 등에 펀드 자금 등을 송금하여 편취



-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-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,
 - 동 계약에 따라 공사비·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하여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하였습니다.
 - 또한, 허위·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의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.

□ 한편, 허위·가공의 용역 계약 외에도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하였습니다.

-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(GP)의 실질 대주주*는 명의상 주주·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, 자문료를 수취하고,

* 외견상 해당 GP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해당 GP를 실소유

-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.

유형2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

- ◆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사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투자기회로 활용



□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- 일부 운용사·증권사의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,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*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후

* (부동산) 수익성 관련 중요 정보, 대주단 확보 등, (기업 내부정보) 기업 자체 현금 흐름 분석, 회계법인 가치평가 자료

- 직무정보 활용 사실의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활용하여 PFV(Project Financing Vehicle) 또는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.

- 한편,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허위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
-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하였습니다.

유형3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

- ◆ 대주주·임원 등이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익 추구



- 대주주 등은 금융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,
-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발생 가능성을 파악·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.
- 그럼에도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, 임원 등은 특수관계자(주로 가족명의 법인)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·확보할 목적으로
- ①특수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신용(자금, 담보 등)을 제공하거나, ②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여 영향력 행사 또는 ③이해상충 관리의무를 해태 하였습니다.
- 특히,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 또는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갖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으로
- 이들에 의한 사익추구의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.

Ⅲ. 주요 특징 및 시사점

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 또는 부문에서 주로 발생

-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특히,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·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발생하였으며,
-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감시가 소홀하였던 대체투자(주로 부동산)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.

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 등을 활용

- 사익추구 행위는 통상적인 내부통제활동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도록 설계되는 등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.
- 임직원 등이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다는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으며,
-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, 도관체(SPC, PFV 등)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의 은폐를 시도하였습니다.

대주주,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 추구

-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도 적발되었으나, 대주주 또는 고위 임원이 주도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.
-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 의한 경우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,
- 위법행위 방지·적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.

IV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,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
 -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·통보할 예정이며,
 -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.
-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.
 - 금융감독원은 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샵('23.5.19.)을 통해 주요 사익추구 행위 관련 위규사례 등을 전파한 바 있으며,
 - 향후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 - 아울러, 금융투자협회·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계획입니다.

※ 일부 사례는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위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유형1 허위 · 가공 계약 등 활용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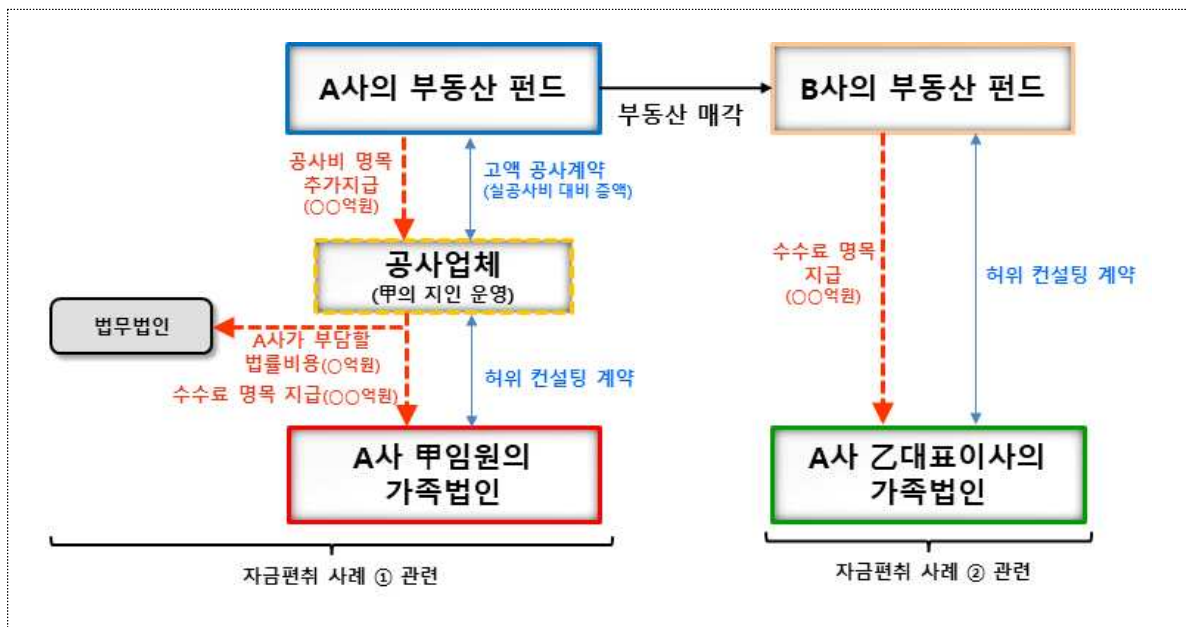
☑ (Case1) 허위 계약 매개 자금 편취 등

① A사 임원 甲은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펀드 보유 부동산의 보수공사비를 고의로 증액(○○억원)하여 계약을 체결

- 펀드에서 과대 지급된 공사비는 건설업체를 경유하여 ❶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甲의 가족 법인이 ○○억원을 수취하였으며, ❷나머지(○억원)는 A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비용으로 사용

② 이후 A사 대표이사 乙은 B사 펀드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

- B사의 펀드와 乙의 가족 법인간 허위의 부동산 매입 자문계약을 체결하고,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○○억원을 수취



③ 한편, 위 B사의 임원 丙은 오피스 빌딩, 물류센터 인수 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를 설정·운용하는 과정에서

- 펀드가 투자하는 대가로 부동산 매도자 또는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족 법인 계좌로 ○○억원을 수취

☑ (Case2) 명의상 주주, 임원을 통한 자금 편취

- ① 기관전용사모펀드(舊 PEF)를 운용하는 GP C사의 실소유주 丁은 C사의 PEF가 인수한 피투자회사의 서류상 임원으로 戊를 등재하게 한 후
- 피투자회사가 급여,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戊에게 지급한 금액(○○억원)을 丁이 직접 출금(戊의 계좌를 丁이 관리)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
- ② 위 丁은 C사의 실소유주임에도 戊를 주주로 등재하고 실제 丁이 사용(개인 경비)한 C사의 자금(○억원)을 戊가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
-

유형2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사례

☑ (Case1) 펀드 또는 고유재산 운용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활용

- ① D사 임직원은 투자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족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관련 PFV에 ○○○억원 투자
- ② E사 임원은 가족 법인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확보 등을 위해 E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일부 정보* 등을 수차례에 걸쳐 당해 회사에 제공
- * 개발사업 발굴, 대주단 확보, 거래구조 설계 및 관련 수수료 금액 등의 정보
- ③ F사 투자운용본부 임직원은 고유재산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피투자기업 관련 정보*를 이용하여 가족 명의로 ○억원 투자
- * 해당 기업의 매출·영업이익 등 관련 전망치, 회계법인 실사, 가치평가 자료 등
-

☑ (Case2) 왜곡된 운용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여 이익

- G사 임원은 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요 임대차계약이 펀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되었음에도
- 펀드 투자자에게는 임차인 계약 해지에 의한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허위의 운용정보를 제공한 후,
 - 타인 명의로 해당 수익증권을 저가로 양수하여 펀드 해산시 고액의 이익(○○○억원)을 실현
-

유형3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사례

☑ (Case1)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

- H사의 대주주 등은 H사가 진행하는 다수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H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
 - 1)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용역수수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수취(○○○억원)
 - 2) H사가 수취하여야 할 보수의 상당액을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수취(○○억원)

☑ (Case2)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

- ① I사는 보유예금 ○○억원을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토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자금*의 담보로 제공

* 대주주의 특수관계자는 동 차입금 등으로 I사 펀드가 매입 예정인 토지를 선매입하고, 약 5개월 후 I사 펀드에 매각하여 ○○억원의 차익 실현



- ② J사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J사가 보유한 해당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(○○억원 상당)을 담보로 제공

☑ (Case3) 이해상충 관리의무 등 해태

- ① K사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가족이 투자한 용역회사와 K사 펀드 간 거래 시
 - 관련 투심위에 참석하거나 계약의 결재자로 승인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, 투자자들에게도 미고지
- ② L사 임원은 가족 명의로 출자한 회사의 상품에 L사 펀드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 절차 등을 취하지 않음